

GLOBAL
ISSUE
BRIEF

2026년 5월호
vol.34

[외교·안보]





부문별 동향과 전망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방문 성과 및 과제

곽 성 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ikwak@kiep.go.kr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안보, 글로벌 사우스 외교 확대라는 세 가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였다. 인도에서는 CEPA 개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또한 조선·원전·핵심광물·AI 등 전략 분야에서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의 실질적인 인도 진출 장애요인은 CEPA 활용 제약, 인증 및 품질관리명령, 복잡한 원산지 기준, 주별 규제 차이이므로, CEPA 개선 협상은 비관세장벽 완화와 서비스·투자 자유화, 공급망 협력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미 한국 기업의 생산 거점인 베트남에서는 2030년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재확인했고, 원전 및 전력 인프라, 핵심광물 공급망,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협력에 관해 구체화하였다. 향후 과제는 MOU의 실행력 확보, 기업 애로 해소,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 마지막으로 공급망 회복탄력성 고도화로 요약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방문 성과 및 과제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sikwak@kiep.go.kr

1. 순방의 전략적 배경과 주요 의제

가. 순방의 전략적 배경

중동 리스크와 미·중 경쟁
속에서 인도·베트남 순방은
한국 외교의 공급망·에너지
다변화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2026년 4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은 단순한 양자 외교 일정이
라기보다는,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한국의 대외경제 전략을 재편하는 계기였
다. 총 5박 6일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순방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인도 뉴델리
에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다(한겨레, 2026).

이번 순방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에너지 및 물류 불안과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공급망 재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이후 호르무즈
해협으로부터의 에너지 운송 차질과 유가 상승, 운임과 보험료 및 환율 상승은 한
국의 공급망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남아시아와
아세안 지역에 위치한 인도와 베트남은 한국 기업에 생산기지이자 시장 및 자원
다변화 전략의 핵심 거점국이자 성장축이다.

이번 순방은 인도와
베트남을 거점으로 '시장
확대'와 '경제안보'를
결합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전략적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핵심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번 순방은 '시장 확대'와 '경제안보'의 결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인도는 제조업 육성 정책과 뛰어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과 조선·반
도체·AI·방산·에너지 부문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 한국의 3대 교역 파트너인 베트남
은 이미 한국의 아세안 생산 네트워크의 거점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원전, 핵심광물
개발, 디지털 전환, 미래 공급망 부문 등에서 상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번 순방은 기존의 수출·투자 확대를 넘어, 한국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회복탄력성
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구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도와 베트남은 각각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핵심 거점으로, 한국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실질화할 전략 파트너이다.

나. 순방의 주요 의제

먼저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인도를 14억 명 인구와 높은 성장세를 보유한 주요 경제 파트너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양국 교역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한겨레, 2026).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조선, 무역, 투자, AI, 반도체, 핵심·신흥기술, 인적 교류, 문화교류와 함께 상호 관심이 있는 지역·글로벌 현안을 논의하였다(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26).

베트남 방문에서는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경제안보와 미래산업 협력으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4월 22일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투자, 에너지·원전, 인프라, 과학기술, 문화·인적교류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가속하기로 했으며, 베트남 신규 원전 건설 및 전력 인프라 사업 참여, 핵심광물 공급망 센터를 통한 공급망 안정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표 1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주요 일정과 의제

구분	일정	주요 상대	핵심 의제
인도	2026년 4월 19~21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 드루파디 무르무 대통령	CEPA 개선 협상, 조선, 원전, 핵심광물, AI, 반도체, 항만·금융 협력
베트남	2026년 4월 21~24일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베트남 지도부	교역 1,500억 달러 목표, 원전·전력 인프라, 핵심광물, 과학기술, 인재 양성

출처: 한겨레(2026), Ministry of External Affairs(20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을 바탕으로 작성

2. 인도와 베트남 방문의 성과와 합의

CEPA 개선 협상 재개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은
한·인도 협력을 교역
중심에서 전략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이다.

가. 인도 방문의 성과와 합의

인도 방문의 첫 번째 성과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개선 협상 재개를 공식화한 점이다. 양국 정부는 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해 15건의 협력 문건을 채택했다. 이 문건들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 항만 인프라 협력, 디지털 브리지 프레임워크, 중소기업 협력, 과학기술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연합뉴스a, 2026). 개선된 CEPA는 한·인도 경제협력을 기존의 상품무역 중심에서 산업·기술·공급망 협력 중심으로 확장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다.

두 번째 성과는 전략산업 협력을 위한 상설 채널을 마련한 점이다. 산업통상부와 인도 상공부는 장관급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조선업, 원자력 발전,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뉴스b, 2026). 특히 산업협력위원회는 정상회담 성과를 실무 프로젝트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EPA 개선 협상과 산업협력위원회를 병행할 경우,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와 전략산업 협력 프로젝트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 번째 성과는 인도 시장 접근의 질적 전환 가능성이다. 인도는 Make in India 정책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등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산업정책은 우리 기업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장 접근과 현지 생산 기반 확대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복잡한 원산지 기준,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 Standards: BIS) 인증, 품질관리명령 등 인도의 비관세장벽이 CEPA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고 우리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6). 따라서 CEPA 개선 협상은 단순 관세율 조정보다는, 인증 절차의 예측 가능성, 서비스·투자 자유화, 공급망 협력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원전·전력망·핵심광물·
과학기술 협력은
한·베트남 관계를 제조업
투자 중심에서 경제안보
협력으로 확장한다.

나. 베트남 방문의 성과와 합의

베트남 방문의 첫 번째 성과는 한·베트남 관계를 ‘제조업 투자 파트너십’에서 ‘경제 안보 파트너십’으로 확장한 점이다. 양국 정상회담 결과로 총 12건의 협력 문건이 체결되었고,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안정, 금융,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보건, 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특히 베트남 신규 원전 건설과 전력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공감대는 한국의 원전·전력망·건설·엔지니어링 산업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성과는 핵심광물 분야에서 얻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베트남 지질광물국(VDGM)과 희토류 자원 분야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내 이온흡착형 희토류 광상 공동 탐사, 선광·추출 기술 공동연구, 지질·광물 데이터 공유, 전문가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데일리안, 2026). 또한 이 협력은 베트남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협력센터 조성사업과 연계되어, 단순 자원 확보를 넘어 탐사·선광·제련·인력 양성·기업 협력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데일리안, 2026).

마지막으로 10,000여 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베트남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경제 협력 강화도 중요한 성과이다.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양국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하고,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인프라, 원전·전력망, 이차전지·첨단소재, 스마트시티, 금융·투자 등에서 70건 이상의 MOU와 계약이 체결되었다(연합뉴스c, 2026). 이 성과는 정상외교가 기업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체결된 MOU의 사업성, 재원 조달 및 현지 인허가, 기술 이전 범위와 위험 배분 구조를 정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

3. 정책적 과제와 리스크

MOU의 이행 관리, 비관세장벽 대응, 기술보호 장치, 현지 제도 리스크 관리가 순방 성과의 지속성을 좌우한다.

첫째, 순방 성과의 이행력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상외교를 통해 발굴된 MOU는 정치적 신호와 사업 기회 발굴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는 후속 일정과 담당 부처, 예산 및 금융 지원, 기업 매칭, 그리고 현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발생한다. 정부는 인도와 베트남을 각각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는 순방 성과 이행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 항만, 전력망, 핵심광물,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부처 간 조율 실패가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므로, 대통령실·외교부·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실무 플랫폼이 필요하다.

둘째, 인도에서는 주별 제도 차이와 비관세장벽에 대비해야 한다. CEPA 개선 협상은 교역 규모 확대의 필요조건이지만, 한국 기업이 체감하는 시장 접근성은 인증, 통관, 원산지 기준, 투자 승인, 토지·노동 제도에서 결정됨을 앞서 확인했다. 사실 BIS 인증과 품질관리명령 문제는 CEPA 활용률을 낮추는 대표적 요인이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26). 따라서 정부는 CEPA 개선 협상과 별도로 '기업 애로 신속 해결 채널'을 구축하고, 인증·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인도 진출 기업 지원 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에서는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원전, 전력망, 핵심광물, AI·반도체 협력은 베트남의 산업 고도화 수요와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만나는 영역이다. 그러나 장기 프로젝트일수록 기술 이전 범위와 운영 및 정비 권한, 현지 인력 양성, 데이터 접근권, 지식재산권 보호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핵심광물 협력 역시 탐사·선광·제련 기술협력과 자원 확보가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계약·환경·노동·지역사회 기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넷째, 금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 노력을 일회성 성과로 남겨두기보다는, 정례화된 경제안보 협력체계의 형성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시화됨에 따라, 기업 경쟁력을 비용 효율성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 대체 물류망 구축, 안정적 핵심광물 조달, 디지털 서비스 수출 확대, 해외 생산거점 리스크 분산 등을 논의할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4. 정책 제언

인도와 베트남은 시장의 제도적 환경과 산업적 수요가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특수성에 맞춘 실행 과제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첫째, 국가별 후속 로드맵을 분리하여 수립해야 한다. 인도는 CEPA 개선, 전략산업 부문의 공동사업, 인증·규제 해소, 디지털·AI 협력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베트남과는 교역 1,500억 달러 목표 달성, 원전·전력 인프라, 핵심광물, 인재 양성, 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 두 국가는 모두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파트너이지만, 제도 환경과 산업 수요가 다르므로 동일한 글로벌 사우스 협력 틀로 묶기보다는 국가별 실행 과제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한 협력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EDCF, 무역보험 등 정책 금융과 연계한 '금융 패키지'를 조기에 마련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MOU 성과를 방치하기보다는 금융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원전, 항만, 전력망,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 핵심광물 프로젝트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금융조달 구조를 형성하지 못하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 기금(EDCF),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과의 연계뿐 아니라 국제개발은행들과 함께 프로젝트별 금융 패키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베트남 전력·원전 프로젝트와 인도 항만·조선·에너지 협력사업은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코리아 데스크'와 같은 전담 창구를 활성화하여 인허가, 세무 등 현지 진출 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장애물을 정상외교 차원의 후속 성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

현지의 기술 내재화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원전·AI 등 국가 전략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과 설계 노하우가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부터 법적·안보적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해외에서의 경제적 성과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중소·중견기업의 진출 확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전략과의 매칭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셋째,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 지원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인도의 인증·비관 세장벽, 베트남의 인허가·세무·전력 인프라 문제는 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다. 국별로 한국 기업 전담 창구를 제도화하고,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협력 분야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연동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재 공관, KOTRA,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협력의 원칙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인도와 베트남 모두 제조업 고도화와 기술 내재화를 요구한다. 한국은 공동연구, 인력 양성, 현지 생산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핵심 원천기술, 데이터, 설계·운영 노하우, 지식재산권 보호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특히 원전·핵심광물·AI·반도체 분야는 기술협력과 안보 리스크가 공존하는 영역이므로, 산업 협력 MOU 단계부터 안보 차원에서 법률과 기술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순방 성과를 국내 산업정책과 연결해야 한다. 인도·베트남 협력 성과가 해외시장 확대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비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협력 성과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로 연결되도록 국내 산업전략과 매칭되는 지원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원전, 전력 기자재, 디지털 서비스 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활동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패키지로 지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인도·베트남 순방은 실용 외교를 통해 경제안보의 지평을 넓힌 전략적 전기였던 만큼, 국익을 집요하게 창출해 나가는 실천적 후속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인도·베트남 국민 방문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실용주의 외교와 지도자 간 신뢰 구축을 통해 경제안보 기반을 넓힌 한국 외교의 전환점이었다. 인도 방문은 CEPA 개선 협상 재개와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을 통해 교역·투자·전략산업 협력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베트남 방문은 원전·전력 인프라, 핵심광물, 과학기술·인재 양성 협력을 통해 기존 제조업 중심 관계를 경제안보·미래 산업 파트너십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순방 성과를 실질적 국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후속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양자 간 MOU를 실질적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계약과 투자로, 계약과 투자를 국내 산업경쟁력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CEPA 개선이, 베트남에서는 기술 보호 장치 마련과 원전·핵심 광물 협력의 사업성 확보가 핵심 과제이다. 이번 순방이 진정한 성과로 기록되면 발표된 합의의 수에 만족하기보다는 한국 기업과 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합의된 사항을 집요하게 현실로 만들어 가는 실천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베 정상회담, 에너지·인프라·과학기술 등 미래 성장 협력 확대,” 2026.4.23,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237>
- 데일리안, “KIGAM, 베트남과 희토류 협력…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2026.4.24, <https://www.dailian.co.kr/news/view/1637495/KIGAM-베트남과-희토류-협력핵심광-2026>
- 연합뉴스a, “韓-인도, CEPA협상 재개선언·산업협력촉진 MOU 등 문건 15개 채택,” 2026.4.20,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124100001>
- 연합뉴스b, “한-인도, 에너지·산업 협력 고도화…장관급 산업협력위 신설,” 2026.4.20,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0163300003>
- 연합뉴스c,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첨단인력·에너지 등 경험 모색,” 2026.4.23,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3163700003>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련, 주한인도대사 초청 중견기업인 간담회 개최,” 2026.4.7., https://www.fomek.or.kr/main/newsroom/news/press_view.php?wr_id=999
- 한겨레,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민 방문,” 2026.4.1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54552.html>
-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Government of India, “State Visit of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H.E. Lee Jae Myung to India (April 19-21, 2026),” 2026.4.16., https://www.mea.gov.in/press-releases.htm?dtl/41047/State_Visit_of_President_of_Republic_of_Korea_HE_Lee_Jae_Myung_to_India_April_1921_2026